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 현황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임 유 경

(a u r i



목 차

- 01. 공공건축이란
- 02. 공공건축의 중요성
- 03. 공공건축 정책 추진 경위
- 04. 공공건축 관련 정책 동향



01

공공건축이란

■ 법적 정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건축의 정의

■ 사전적 정의

○ 건축용어사전 (현대 건축관련 용어 편찬위원회)

공공건축: 공공성 있는 건축물로, 공익성과 공용성을 갖는다. 대부분은 관공서, 공공 단체에 의해 운영되지만 민영의 것도 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공(公共):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공공시설: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Collins Dictionary

public building: a building that belongs to a town or state, and is used by the public.

○ Oxford Dictionary

public building: a building used by the public for any purpose, such as assembly, education, entertainment, or worship.

■ 연구자와 건축가의 정의

- 김성홍 외(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협의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위치한 공공업무와 관련된 용도의 건물, 광의적으로는 공공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로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콘서트홀, 회의장 등의 교육문화 시설

- 조명래(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2007 제1회 AURI 공공건축 설계포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생성된 정부건축, 공용건축, 공공화된 건축을 모두 공공건축으로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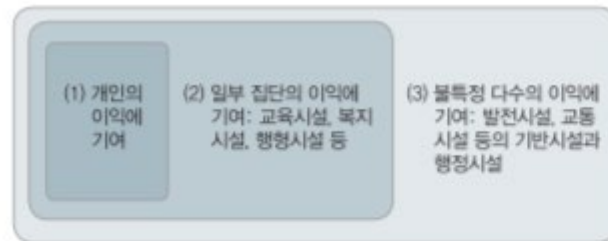
- 조성룡(2014), “공공의 건축, 공공하는 건축”, 「건축과 사회」, v.26

정부나 지방자치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에서 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철학을 실천하는 관점에서 설명한 ‘공공하는’ 철학의 개념에 주목하여 ‘공공건축’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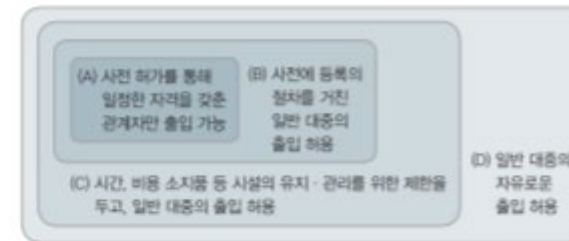
공공건축의 정의

■ 공공적 가치(공익성과 접근성)를 고려한 공공건축 정의

- (최소 범위)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
- (최대 범위)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거나 공공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 포함)과 공공공간



공공적 가치: 공익성의 수준



공공적 가치: 접근성의 수준



공공건축의 대상: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



공공건축의 대상: 공간적 범위

출처 : 이규철,임유경,김혜련,이상아(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공공건축 = 일반적인 민간건축과 다른 원칙이 필요



출처 : 오성훈, 임유경, 이성일(2017),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공공건축 = 일반적인 민간건축과 다른 기획이 필요

하나,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둘, 어떻게 공간으로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셋, 어떻게 기존 공공서비스의 체계에 연결할 것인가?

넷, 어떻게 주변 공공 및 민간시설과 연계할 것인가?

다섯, 어떻게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건축환경을 선도할 것인가?

여섯, 어떻게 기후변화 및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선례로 조성할 것인가?

일곱, 어떻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킬 것인가?

출처 : 오성훈, 임유경, 이성일(2017),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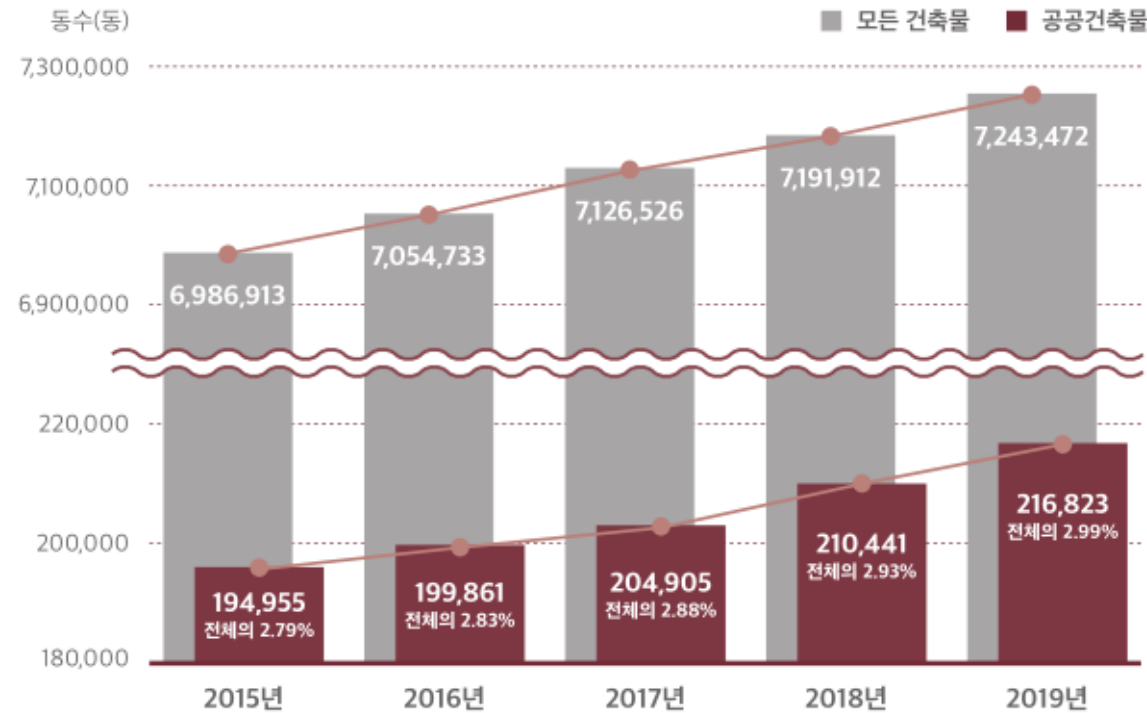
02

공공건축의 중요성

전국 공공건축물 현황

약 **6,382** 매년 증가하는 공공건축물 동수('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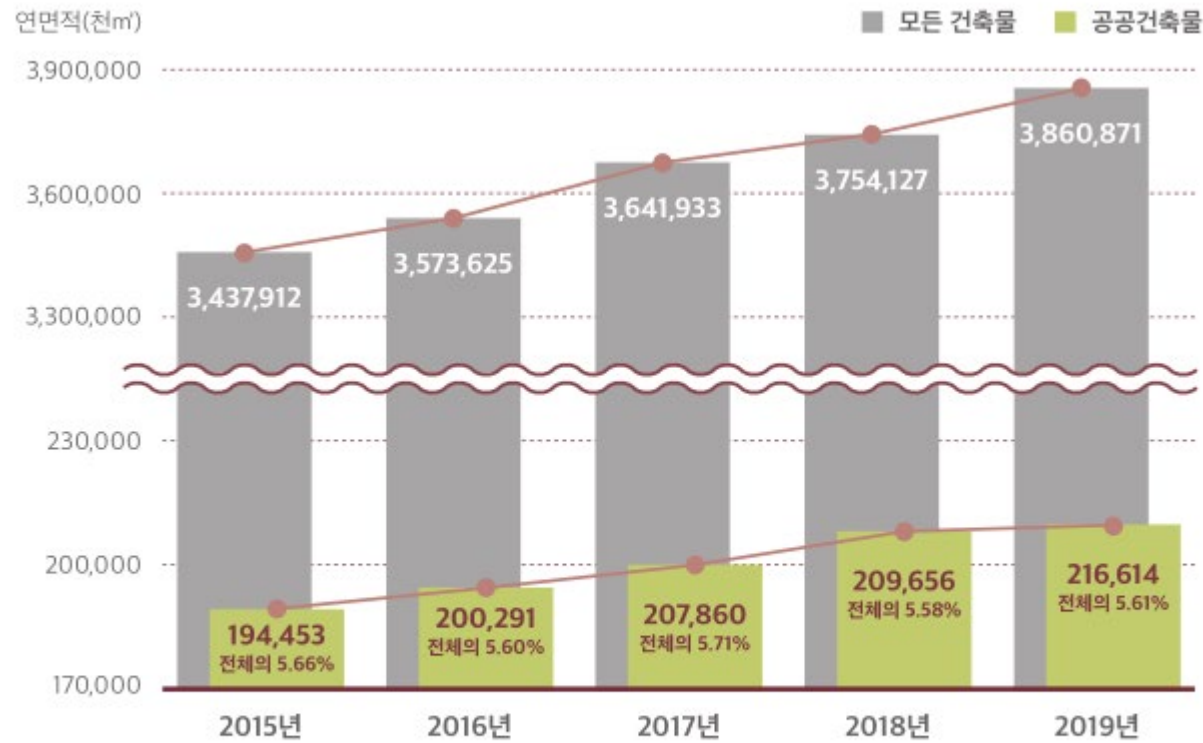
공공건축물 동수 연평균 증가율(2.7%)는 전국 건축물(0.9%)의 **3.0배**



| 전국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동수 |

전국 공공건축물 현황

216,614,000m² 공공건축물 연면적



| 전국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연면적 |

※ 출처: 2019 건축통계집, 국토교통부

전국 공공건축물 현황

2019년 한 해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에서 계약한 공사용역은 총 47,853건, 51조 4,853억 원

이 중 건축공사는 **16,440건** (34.4%), **19조 6,176억 원**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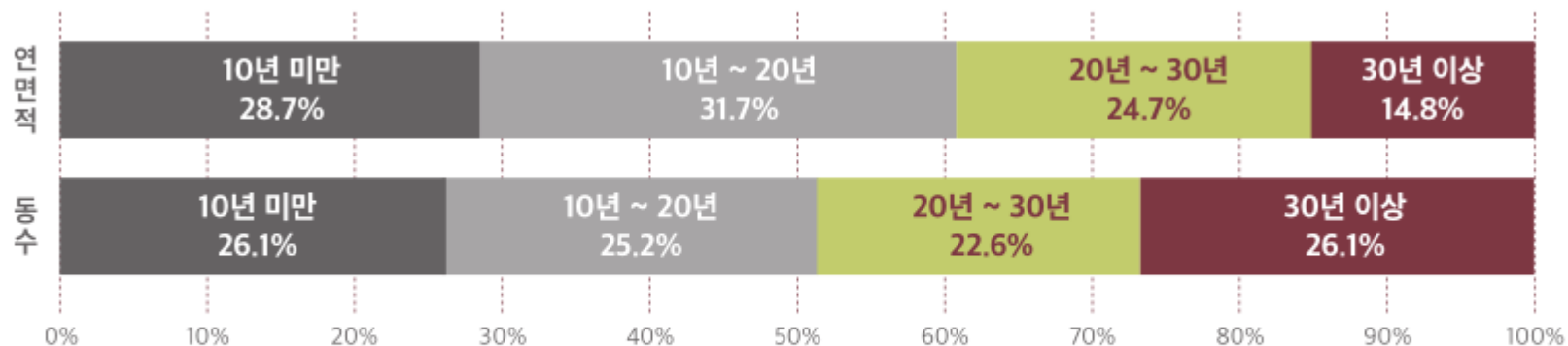
공공발주 공사 계약 건수 및 금액(2019년)

구분	건수(건)	비율	금액(백만원)	비율
합계	47,853	100.0%	51,485,316	100.0%
건축공사	16,440	34.4%	19,617,570	38.1%
산업환경설비공사	496	1.0%	1,535,243	3.0%
조경공사	5,702	11.9%	1,828,967	3.6%
토목공사	25,215	52.7%	28,503,536	55.4%

* 공사현장이 국외인 경우 제외

공공건축물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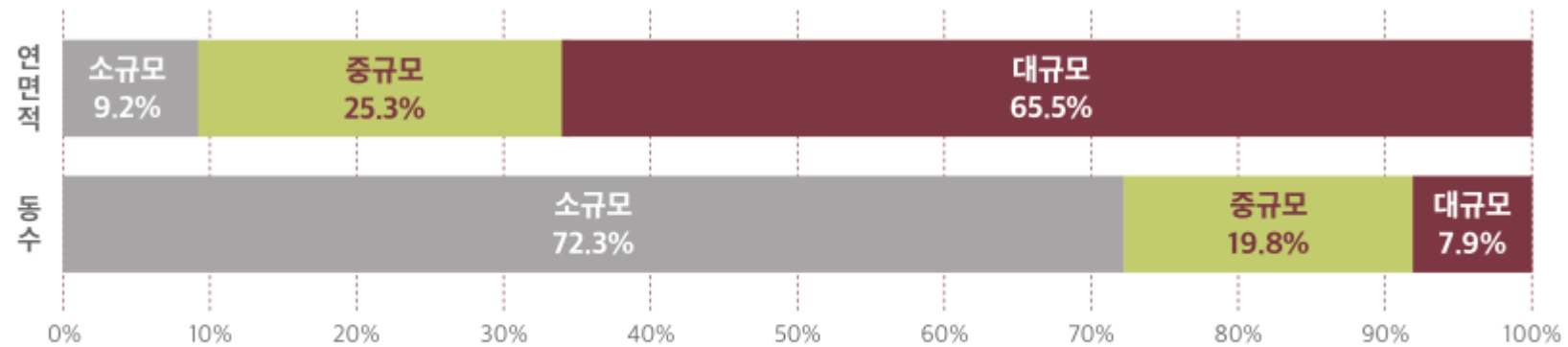
2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은 전체 동수의 **49%**



| 노후도별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

공공건축물 규모 현황

10동 중 7동 소규모(500㎡) 공공건축물 비중



| 규모별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

공공건축의 의의

- 공공건축; 공공서비스의 물리적 교두보
- 공공건축;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간적 복지의 중심
- 공공건축;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 공공건축; 민간건축, 공공시설을 잇는 가로환경구현의 촉매
- 공공건축; 도시 차원의 다양한 맥락과 정체성을 확보
- 공공건축; 미래지향적, 신기술 건축의 선도사례

출처 : 오성훈,임유경,이성일(2017),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공공서비스의 물리적 교두보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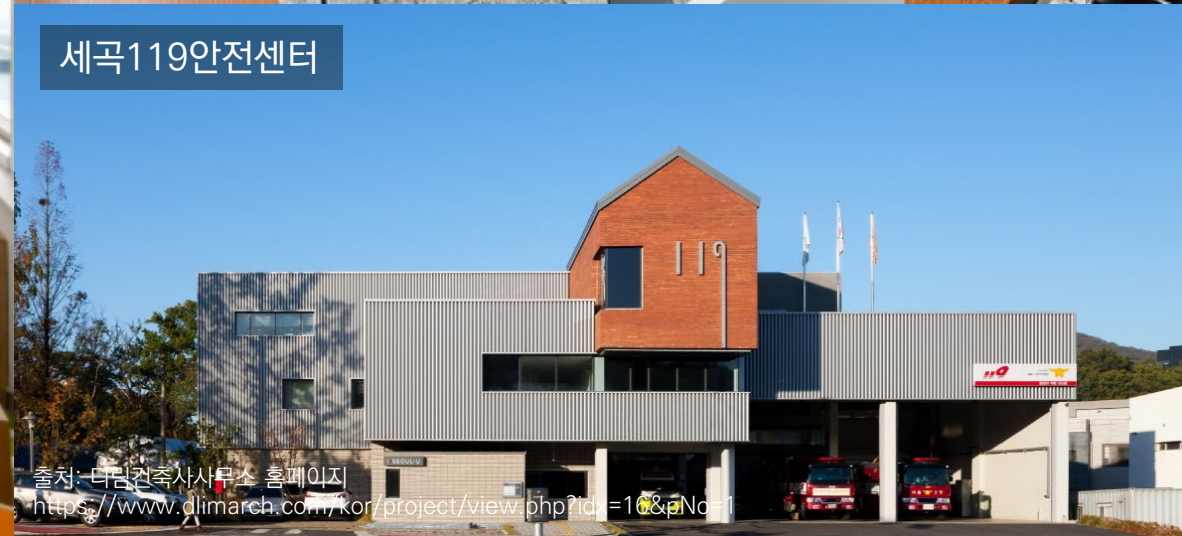
출처: 플로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floarchitects.kr/libraryvillage>

역삼2동 주민센터



출처: 림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limarchitects.com/blank-9>

세곡119안전센터



출처: 다림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dlimarch.com/kor/project/view.php?id=16&No=1>

공공건축,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간 복지의 중심

■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연도	연면적	이용자설문	시설명	건축연도	연면적	이용자설문
세종시립의원	1991년 (16 리모델링)	989㎡	○	세종시 보건소	2009년	2,709㎡	○



[세종시립의원]



[세종시립의원]



[세종시립의원]



[세종시 보건소]



[세종시 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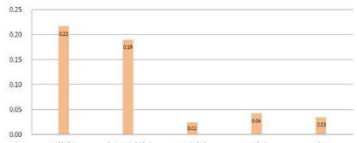


[세종시 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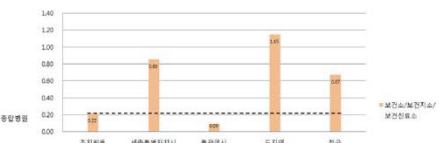
■ 공급수준

- 조치원을 종합의료시설의 인구 대비 공급 수준은 세종시 및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 보건시설은 특광역시보다 다소 높았으나, 세종시 및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시설 구분	조치원읍		세종시		특광역시		도 지역		전국	
	시설수	인구 만명당 시설수	시설수	인구 만명당 시설수	시설수	인구 만명당 시설수	시설수	인구 만명당 시설수	시설수	인구 만명당 시설수
종합의료시설	1	0.22	4	0.19	56	0.02	119	0.04	179	0.03
보건시설	1	0.22	18	0.85	217	0.09	3,241	1.15	3,476	0.67



[인구 만 명당 보건의료시설(종합의료시설) 개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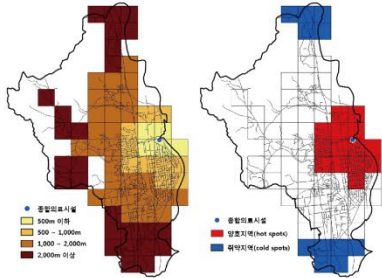


[인구 만 명당 보건의료시설(보건시설) 개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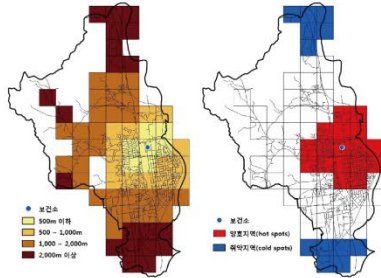
■ 접근성

- 조치원읍의 보건의료시설 중 보건소의 접근성이 종합의료시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1,000m 내 접근성을 보면 종합의료시설은 전체 인구의 29%를 서비스하지만, 보건소는 37%를 서비스함
- 공공건축물 유형 중 보건의료시설의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시설 구분	500m 이내		1,000m 이내		2,000m 이내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종합의료시설	4,072	8.8	13,540	29.2	40,756	87.8
보건시설	7,293	15.7	17,121	36.9	43,587	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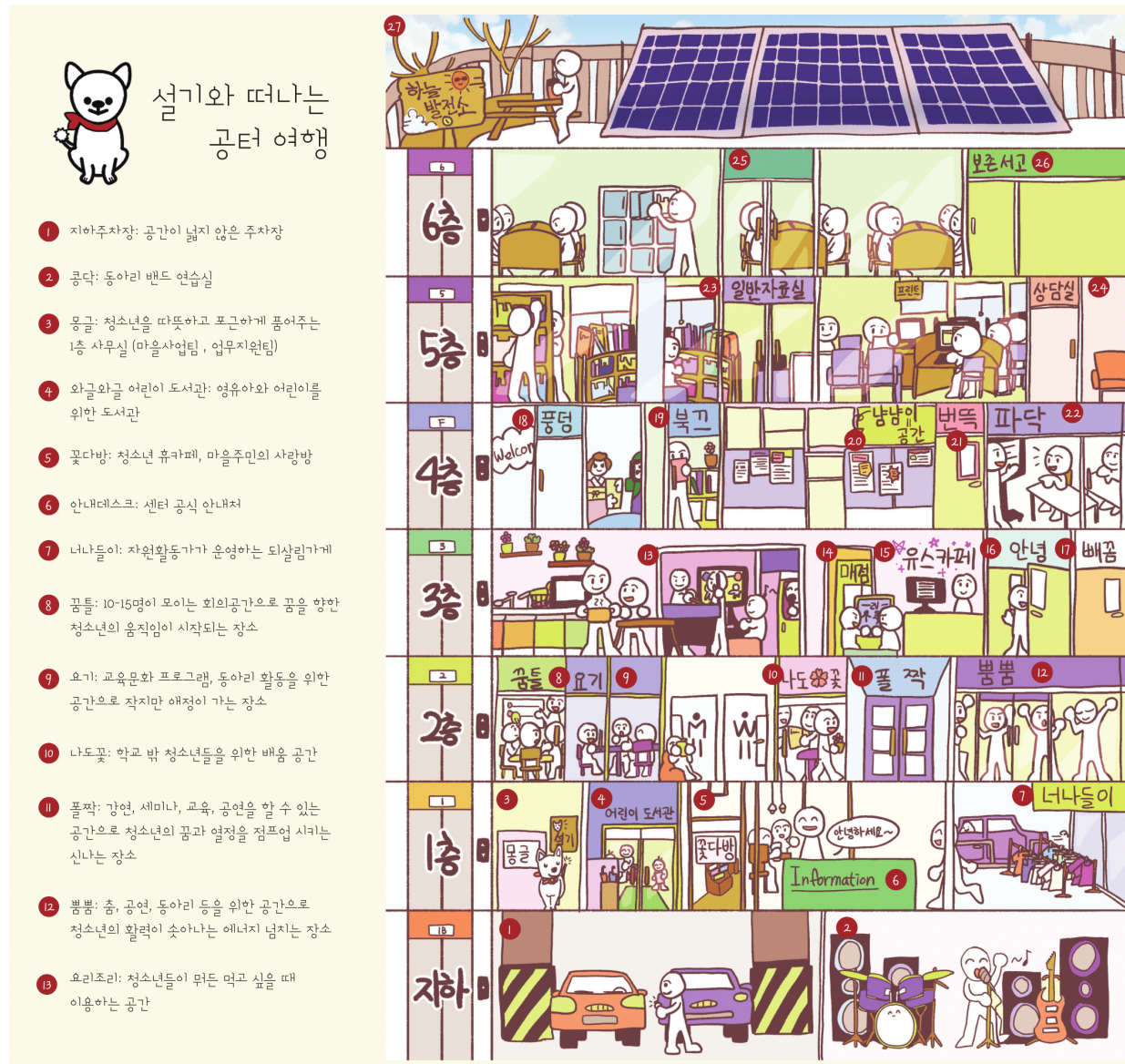


[접근성 지역간 격차(종합의료시설)]



[접근성 지역간 격차(보건시설)]

공공건축,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출처 : (왼쪽) 설기와 떠나는 공터여행 <http://www.gycenter.or.kr/sub01/sub01-8.php> 의 일부

(오른쪽) EUS+ ARCHITECTS 홈페이지 <http://eusarchitects.creatorlink.net/architecture/view/1576464>

공공건축, 민간건축, 공공시설을 잇는 가로환경 구현의 촉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공건축, 도시 차원의 다양한 맥락과 정체성을 확보



Norwegian National Opera and Ballet

출처 : <https://snohetta.com/projects/42-norwegian-national-opera-and-ballet>

공공건축, 미래지향적, 신기술 건축의 선도사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03

공공건축 정책 추진 경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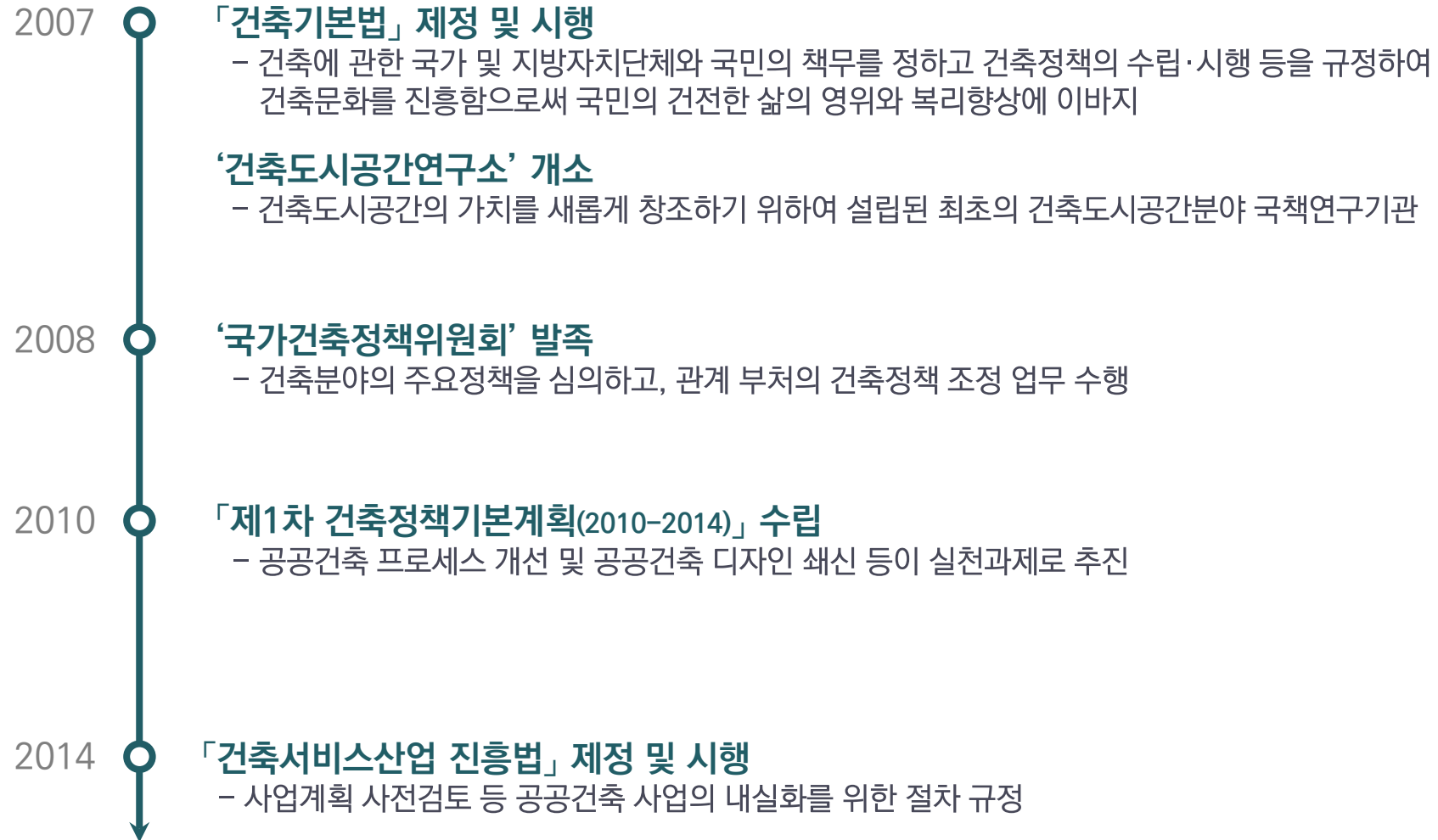
시기	제목	추진주체·연구기관	주요 내용
1999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건설교통부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 집중투자, 신속·합리적 보상, 품질·기술위주 경쟁체제 구축, 민-관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책임지는 사업풍토 조성
2000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	건설교통부	체계적인 부실방지 시스템 마련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 분야별 개선방안 제시
2005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계획의 합리화 및 사업결정 체계 개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 및 갈등관리,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지출방식의 전환, 사업관리능력의 향상 및 효율적 사업관리시스템의 적용, 통합적 사업추진절차 및 공공사업 효율화 지침 마련
2006~7	공공사업 투자효율화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2단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공공사업 혁신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신중한 기획, 완공위주 사업시행, 프로세스간 연계성 중시, 공공서비스의 질적 충족
2008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방안	국토해양부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 사업비 절감 방안 제시
2010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국토해양부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 성장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확충
2010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	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결과중심의 사업관리로 전환

■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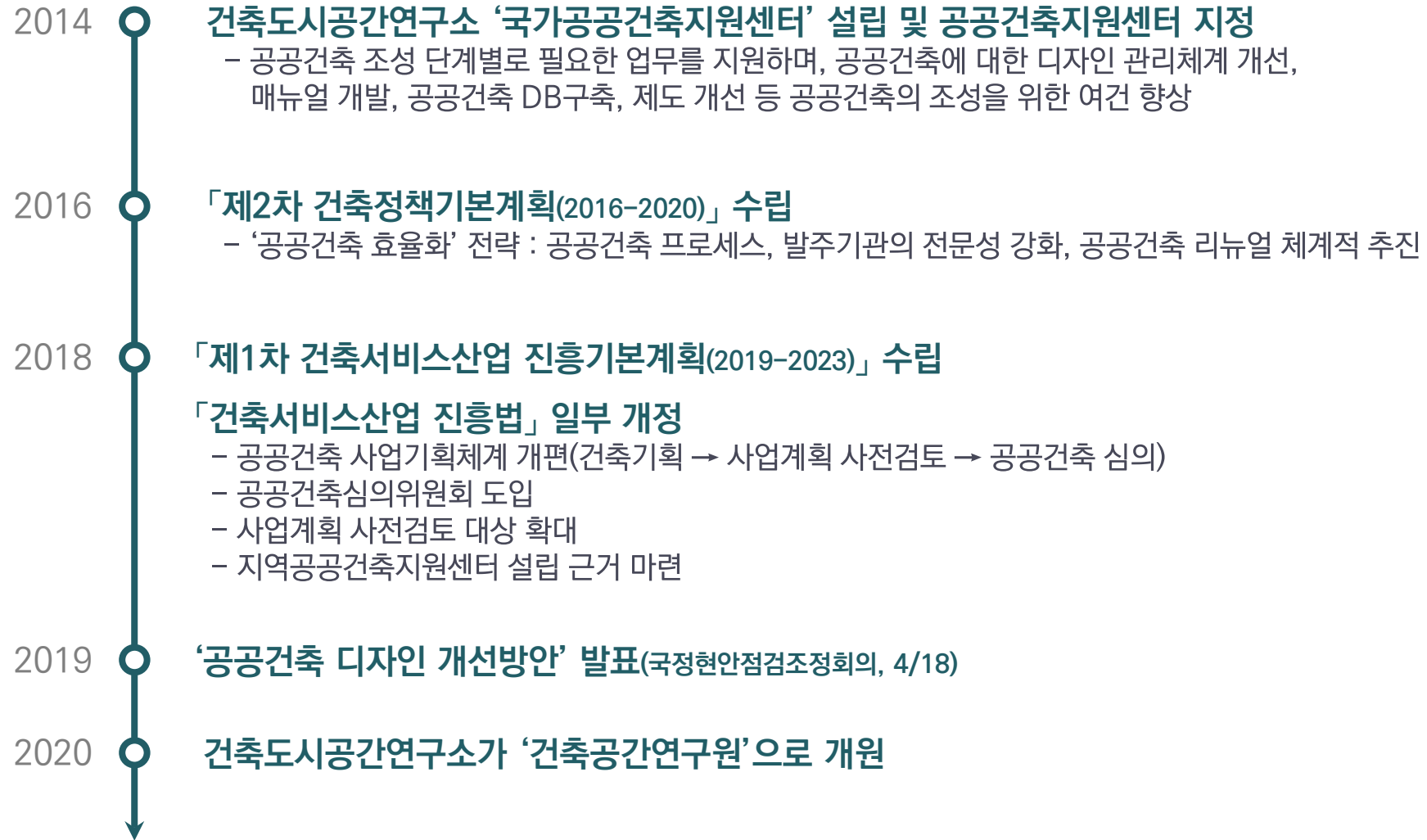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의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전략1 건축문화 혁신기반 조성	창의·예술성 제고를 위한 건축/경관 제도 정비 전문가에 의한 도시경관 관리 건축문화 지원네트워크 구축
전략2 공공선도 프로젝트 시행	건축문화 이벤트 개최 좋은 건축물 프로젝트 기획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 공간환경 조성
전략3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세계일류 건설브랜드 확보를 위한 R&D 프로젝트 신기술 개발 활용 촉진 R&D 투자·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화
전략4 글로벌스탠다드 생산체계	기술경쟁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 건설기술의 국제화 및 설계 품질 제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공공건축 정책의 추진경위



공공건축 정책의 추진경위



「건축기본법」 제정 (2007)

■ 제정 목적

-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 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
 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조성

■ 주요 내용

- (제7조~제9조)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등
- (제10조~제12조)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제19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등
- (제21조~제23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

» 건축정책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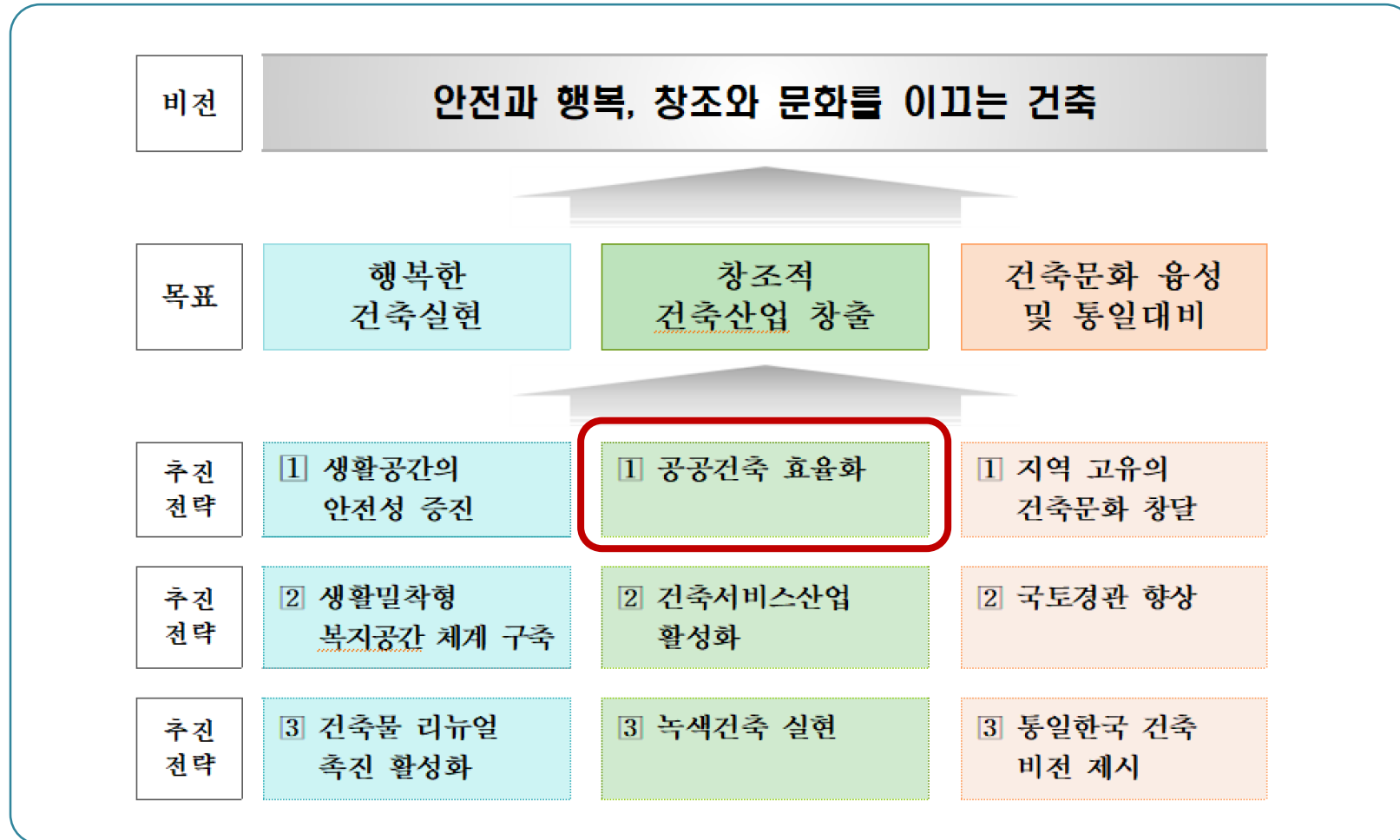
「건축기본법」 제 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 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0-2014)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추진전략	실천과제	세부실천과제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통합 디자인 실현
		공공건축물·시설물의 발주방식 다양화
		관련 법령 간의 효율적 연계·통합을 통한 법체계 위상 정립
		다양한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조직 모델 보급
건축·도시 환경 개선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공공부문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 및 환경개선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개선 및 강화
		공동주택·공공건축물 디자인심의 강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6-2020) : 공공건축 효율화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6-2020) : 공공건축 효율화

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 (사전기획업무 강화)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확대
- (성과관리체계 구축) 기획단계~이용단계의 평가·관리 제도를 연계하여 총괄관리
- (총괄조정체계 구축) 각 부처별 공공건축 제도 및 조성정책의 연계 및 조정, 공공건축물 발주에 관한 통합 기준 마련, 정보 일원화 체계 구축

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전담부서 부재 및 전문인력 부족 지자체 대상 지원
-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지원·대행 기능 확대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지역의 공공건축 사업 지원업무 수행
- (지자체 공공건축 발주부서 전문직 확대) 지역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채용기회 확대
- (예산책정 지원체계 구축)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등 지원

3. 공공건축 리뉴얼 체계적 추진

- (리뉴얼 진단) 준공연도, 재난안전성, 사용성 등 건축물의 리뉴얼 관련 현황 파악
-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21-2025) :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



» 건축디자인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건축기본법」 제 21조 (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포함사항

1.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정, 2009년)

■ 목적

-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기본 방향

-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 방향, 사업방식 등 큰 틀을 결정하는 초기 기획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 초기 기획과정에서 정해진 사항은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등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련된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이 구현되어야 한다.
- 통합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고, 관련되는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민간전문가

「건축기본법」 제 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대통령령에 따른 업무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설립 목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 토대로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경쟁력 향상의 요소로서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

■ 주요 기능

-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 및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 건축·도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책 수립 및 건축·도시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 건축·도시공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연구
-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참여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 건축·도시공간 및 건축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관련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설립 목적

- 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 조정 업무 수행

■ 주요 기능

-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2013)

■ 제정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주요 내용

-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제10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표준화 기반조성 등
- (제13조~제20조)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 (제21조~제24조) 공공건축물의 품격제고를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지원센터 등
- (제25조~제3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2013)

[제·개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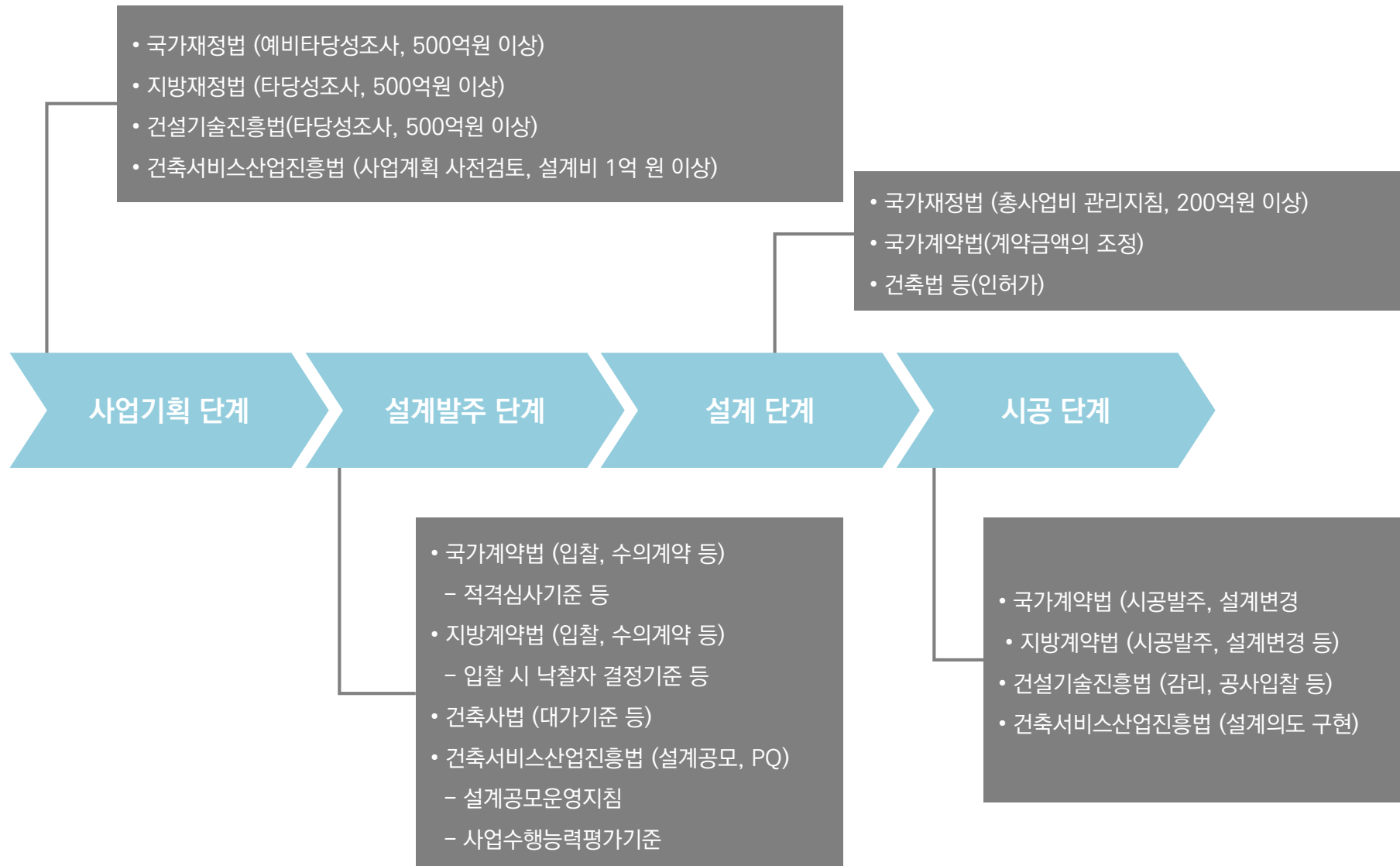
바.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한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 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장	조문번호	조문명	주요 내용
제4장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경 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 청하여야 함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국토부장관은 사전검토와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출처: 「건축서비스법」 [시행 2014. 6. 5.] [법률 제11865호, 2013. 6. 4., 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타 법과의 관계



»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조성 기획 단계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적정 규모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계획하고 발주 방식을 포함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디자인 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2항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일정 규모 이상 및 용도 해당 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을 적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4조 (공공건축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 제23조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14.06 지정)

법정업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조성관련 자문응답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업무

기본구상 및 기획 지원

설계공모 운영 지원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지원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연구업무

공공건축 관련 기준 및 사례 연구

공공건축 관련 제도개선 연구

공공건축 관련 매뉴얼 개발

» 설계의도 구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2조 (설계의도 구현)

-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 · 시공자 ·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절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2조 (설계의도 구현)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 위치 · 재질 · 질감 ·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 보완

04

공공건축 관련 정책 동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2018)

→ 건축기획 개념 명문화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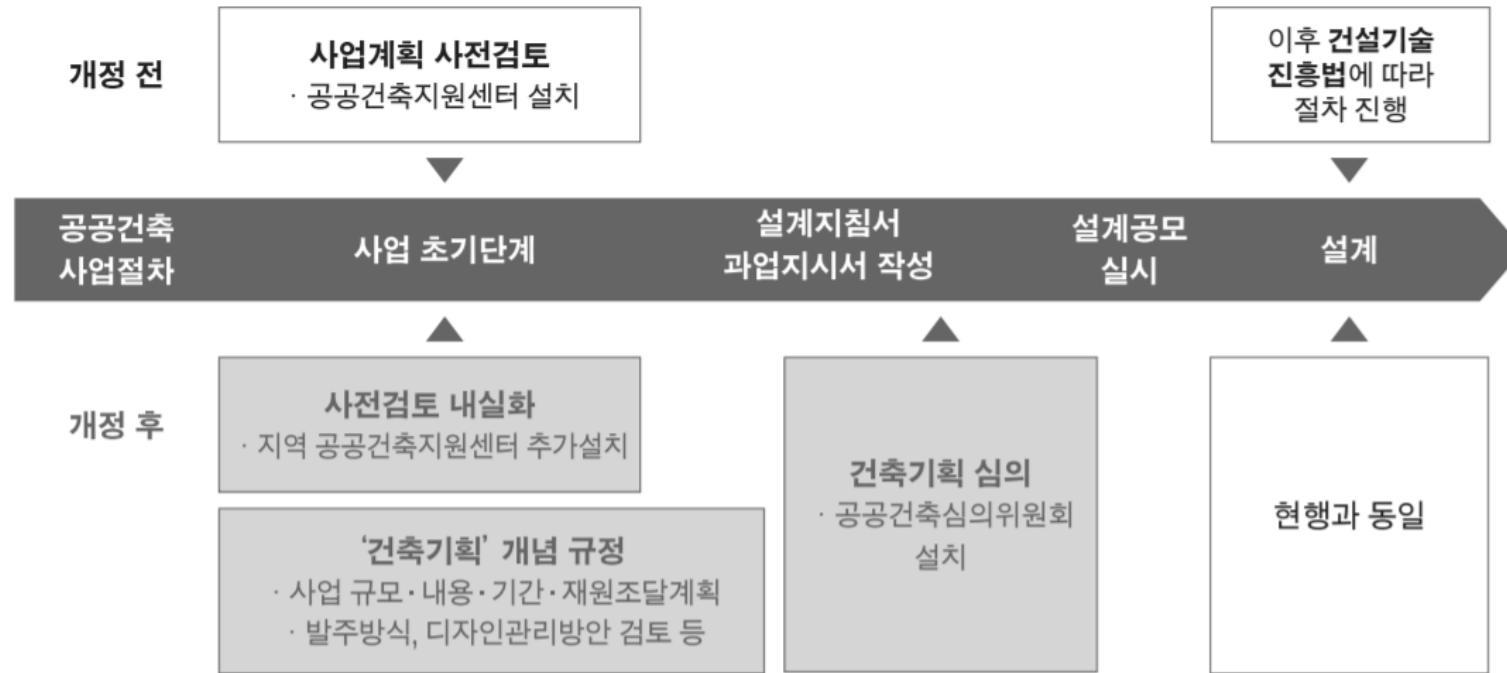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국토부장관 지정) 외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설계공모(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 동법 시행령 개정(19.01.15 개정, 20.1.16. 시행)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설계비 2.0억원 이상 사업에서 설계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2018)



[「건축서비스법」 개정 전후 업무절차 비교]

출처:방대혁(2020), “건축기획 본격 시행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건축과 도시공간」 Vol.3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건축기획 개념 명문화

→ 건축기획 개념 명문화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 주요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국토부장관 지정) 외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주요 내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0년 설립·운영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 부산시
2021년 설립·운영 :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대구시 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

지역 공공건축의 효율적 운용과 품격향상과 관련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핵심적 조직으로서 역할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흥법 제23조)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공공건축 건축기획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담은 건축기획 수행

공공건축 자문응답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관리,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진흥법 제22조의3)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로 대체 가능)

민간전문가 운영

(건축기본법 제23조)

공공건축 정책 추진 및 공공건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의 추천, pool 관리, 모니터링 등

설계공모 시행

(진흥법 제21조)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공모 의무대상이 설계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설계공모 지원 및 대행 필요성 증대

지역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지역 공공건축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략 계획 수립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 등과 연계한 공공건축 활용 계획 등 포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설계공모 대상 확대

→ 설계공모(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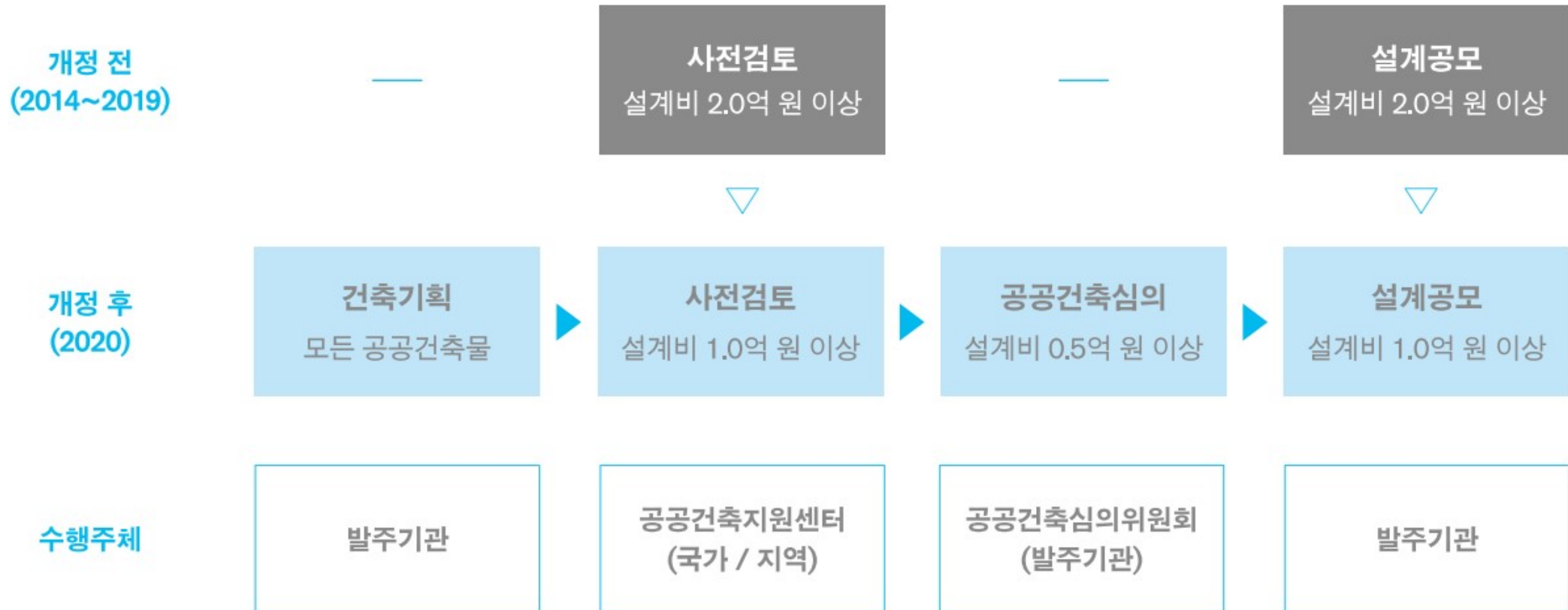
- 동법 시행령 개정(19.01.15 개정, 20.1.16. 시행)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설계비 2.0억원 이상 사업에서 설계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의 주요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말한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절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전·후 공공건축물 조성절차 비교



» 건축디자인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2019년)

■ 목적

-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

■ 기본 방향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간 또는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 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업무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디자인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2019년)

■ 건축디자인 단계별 기준

사전조사 및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결과와 사업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 목표, 규모, 사업추진 방향 등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설계 발주방식
결정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는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기획업무 의뢰 및
사전검토의 실시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설계발주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내실있는 기획업무를 위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질의 설계안
구현

설계공모 등을 통해 당선된 공모안의 우수한 디자인이 사업기간 단축이나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훼손되지 않고 양질의 설계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생활SOC 3개년 계획 (2019)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0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 1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 2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 3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0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4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우육원 돌봄체계)
- 5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 6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0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7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 8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술, 휴양림, 야영장)

추진방식혁신(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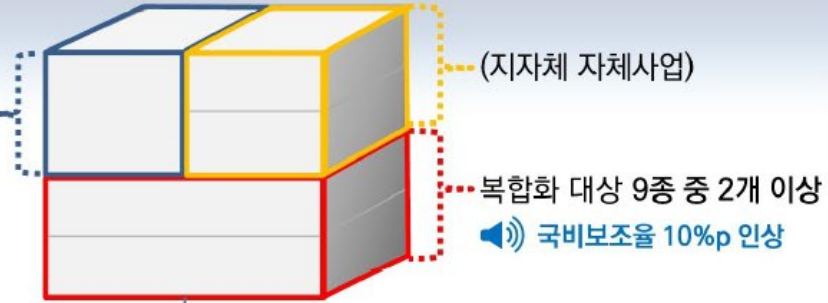
(순과정) 지역주도 - 중앙지원, 주민참여

총 투자규모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 수준 투자

생활SOC 3개년계획 이후 우리의 미래상

분야	시설	현재('18년말)	미래('22년 착수기준)
체육	공공 체육관	· 13분내 접근(963개, '17) * 53만명/개소, 선진국 40% 내외	· 10분내 접근(1,400여개) * 34만명/개소, 선진국 60% 내외
	공공 수영장	· 22분내 접근(406개, '17) * 126만명/개소, 선진국 25% 수준	· 15분내 접근(600여개) * 8.5만명/개소, 선진국 55% 수준
문화	공공 도서관	· 12분내 접근(1,042개, '17) * 5만명/개소, 선진국 70% 수준 · 열람실 위주, 노후 * 20년 이상 34%	· 10분내 접근(1,200여개) * 43만명/개소, 선진국 90% 수준 · 문화·돌봄 등과 복합, 노후시설 리모델링
	생활문화센터	· 시군구당 0.6개(141개)	· 시군구당 1.3개(300여개)
기반 시설	LPG배관망	· 1.3만세대 * 3개군, 136개 마을	· 5.5만세대 * 13개군, 320여개 마을
	주차장	· 연평균 1천면 공급	· 3년간 11만여면 공급 * 110여개소
자녀 돌봄	공공부문 어린이집	· 공보육 25.2% * 6,090개(수혜아동 35.4만명)	· 공보육 40% * 8,600여개(수혜아동 50.2만명)
	국공립 유치원	· 국공립 취원율 25.4% * 10,896학급	· 국공립 취원율 40% * 12,900여학급
	은종일돌봄 (초등돌봄)	· 수혜아동 36.2만명 * 초등돌봄교실 1.24만개소 * 나남새마을센터 17개소	· 수혜아동 53만명 * 초등돌봄교실 1.5만여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1800여개소
취약 계층	고령자복지주택	· 2,426호	· 4,000여호
	공공요양시설	· 시군구당 0.5개(110개)	· 시군구당 1.1개(240여개)
공공 의료	지역책임 의료기관	· 없음	· 40여개 지정
	주민건강센터	· 시군구당 0.3개(66개)	· 시군구당 0.5개(110여개)
안전	교통	· 교통사고사망 3,781명 * OECD 32위/35개국('15)	· 교통사고사망 2천명대 * OECD 상위 30% 수준
	화재	· 다중시설보강필요대상조사	· 720여동 보강 (필요대상의 약50%)
	지하매설물	· 지하공간지도15개 도시	· 지하공간지도160여개도시
	재난	· 우수저류시설 91곳 * 침수피해우리지역의 47.4%	· 우수저류시설 127여곳 * 침수피해우리지역의 66.1%

(생활SOC 135종)



문체부	① 공공도서관
	② 작은도서관
	③ 국민체육센터
	④ 생활문화센터
복지부	⑤ 어린이집(공공립)
	⑥ 건강생활지원센터
	⑦ 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	⑧ 공동육아나눔터
국토부	⑨ 주거지주차장

The diagram illustrates three types of data redundancy using 3D block representations:

- 수직 (Vertical):** A single vertical stack of two blocks labeled '용도1' (Use 1) and '용도2' (Use 2). This represents vertical redundancy where data is repeated across different storage units.
- 수평 (Horizontal):** Two separate blocks labeled '용도1' and '용도2' placed side-by-side on a green base. This represents horizontal redundancy where data is repeated across different storage units.
- 중복 (Duplicate):** Two separate blocks labeled '용도1' and '용도2' placed side-by-side on a green base, with a plus sign between them. This represents duplicate redundancy where data is repeated across different storage units.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19.04.18. 국무총리 주재)에서 범 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보고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
- 설계공모 적용 대상 확대 및 공모방식 다양화
- (가칭)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
- 5개 부처사업 디자인 개선 추진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화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발주기관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주요 내용

총괄·공공
건축가
성공사례
확산

-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배포 (~11월)
- ◆ 전문가 DB 구축(6월), 민간전문가 시범사업 추진(5월, 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선정)

발주기관
지원정책
강화

- ◆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준 향상
- ◆ 지역개발사업 주무부처의 모니터링, 디자인컨설팅 등 관리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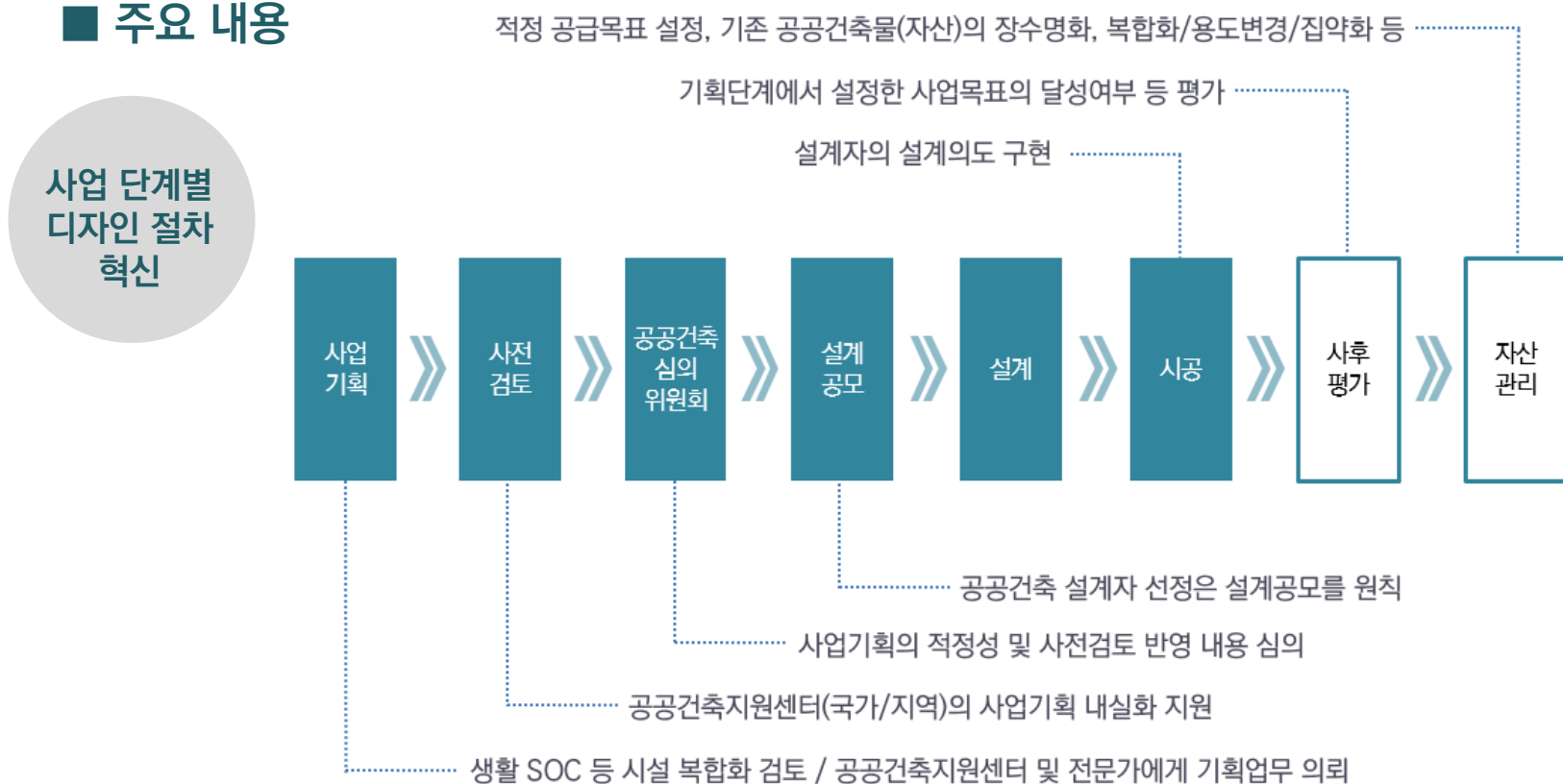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사업 단계별 디자인 절차 혁신

- 좋은 설계자 선정으로 설계의도 변질없이 높은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신축 및 기존 노후건축물, 소형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개선 정책 확대

■ 주요 내용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의
현장실행력 제고

-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범정부협업체 구성

■ 주요 내용

협업
·
지원체계
마련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현장까지 제대로 적용되도록 **협업·지원체계 마련**

- ◆ 국토부, 행안부, 조달청, LH 등이 각각 운영 중인 **설계공모 운영 원칙 통합**
-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업무기준**」 개정

*①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② 지역개발사업 內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제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외 대상도 실시를 권장

– 각 부처 사업별 시행지침 또는 관계법령에 업무기준 반영 추진

- ◆ 지속적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한 (가칭)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의
현장실행력 제고

-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범정부협약체 구성

■ 주요 내용

시범사업
선정
성공사례화

도시재생 등 상징성·파급력 큰 5개 시범사업을 선정, 성공사례화 추진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범정부
협약체
구성

관련 부처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간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범정부협약체」를 구성,
사업과정의 협업과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성과 조기 실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5.19)

건축·도시공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문화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바,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